

정리하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야권연대 반대!
혁명정당 건설!

혁명

총선특보 5호

발행일 : 2012년 3월 28일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반MB 야권연대에 의해 봉쇄되고 있는 노자간 전국 투쟁전선, 대안적 정세 구심을 세워 돌파해야 한다!

지금 여야 정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제도언론들은 4. 11 총선을 정권 심판론 대 미래세력 선택론의 구도로 몰아가는 데서 일치를 보고 있다. 현 새누리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명박 정권 심판론과 야권연대에 전전공공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빌미는 알다시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야권연대가 제공하고 있다.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일이다. 총선 후보단일화 추진부터 이 정희 후보 사퇴까지 야권연대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이 보인 행태는 기성 정치권의 부르주아 정당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간판만 바꾸었음에도 어느 새 심판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대안 세력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야 공히 노자간 계급 적대를 은폐

새누리당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각각 제출하고 있는 '10대 공약'(물론 이 자체도 실은 헛공약일 뿐

이지만) 사이에 본질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야권연대가 합의한 "▲서민·중산층의 '고통해소'를 위한 '민생 안정' 최선 5대 과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적폐 청산'과 '역사 복원'을 위한 5대 과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 실현 7대 과제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 시행 반대 ▲제주 강정마을 균형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 등", 철저히 노동과 자본의 계급 적대를 비껴가고 은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 구도로 '원위지' 했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기사화시킨 것이다. 안철수가 '정치에 나서더라도 진영(보수 대 진보) 논리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노자간 계급적대에 눈을 감고 그로부터 벗어나고 나아가 은폐할 수 있을 때만이 자신의 현 입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세력화 과제에 앞서 당면 정세에 대응해야

이번 4. 11 총선은 이미 열우당 정권 당시의 민노당 때부터 만신창이가 되어 온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야권연대에 의해 완전 폐기되었음을 최종 확인시켜주는 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야권연대로 인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정치세력화 과제로 결코 넘겨버릴 수 없는 당면한 정세적 과제가 있다. 야권연대가 끼친 정세적 효과, 계급투쟁에 미치는 당면한 악영향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 정치세력화도 이러한 정세 대응 속에서만 진정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

야권연대가 계급투쟁에 미치는 효과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노자간 계급적대를 전면화함으로써 투쟁을 전국화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반MB 선거 심판으로 몰아가 각각의 투쟁들을 더욱 개별화, 고립화시킨다는 점이다.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광장', 장투 사업장 투쟁과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최저임금인상투쟁/생활임금 쟁취투쟁, 대학등록금 폐지투쟁, 핵반대 투쟁, 해적기지 건설 반대투쟁, 민영화 반대투쟁, 재벌 반대투쟁 등 모든 투쟁들이 반MB를 넘어 자본주의의 그 자체를 겨냥한 단일한 전국 투쟁전선을 펼쳐야 하며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이 야권연대에 의해 봉쇄되고 그 잠재적 뇌관이 제거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제에 앞서 당면한 핵심 정세 과제는 이러한 전국 투쟁 잠재력을 폭발시킬 정세적 대안 구심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MB 야권연대에 대항하는 전국 정치전선을 세워 내는 것이다. 이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지금 이것이 빠르게 추진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세력의 힘이 미약해서만이 아니다. 그 보다는 그럴 수 있는 세력들조차 정세 대응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세력, 사회주의 세력들조차 자기 조직의 조건과 한계를 앞세워 대중의 분노와 역능을 체제에 반역하고 체제를 변혁하려는 힘으로 조직하고 전환시키려고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주체 내부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빠르게 이를 극복해야 한다.

혁명

핵안보정상회의, 제주해군(해적)기지, 천안함2주기를 둘러싼 안보 논쟁도 허구다.

4. 11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예외 없이) 이른바 '안보 논쟁', '이념 공세'가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리하던 선거 판세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제주해군기지 논란, 천안함2주기 행사 등을 통해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고 회의 일정을 총선을 앞두고 잡은 것부터가 이미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천안함2주기가 그 시기에 겹쳐 있었던 것도 충분히 감안되었을 것이다. 마침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논쟁도 터져 나왔다. 뿐만 아니라 북이 어떤 논리/의도에서 들고 나왔던 간에 북의 발표와 태도를 보수세력이 그냥 놓칠 리 없다. 바야흐로 '색깔론 대 민생론'이라는 허구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물론 보수진영에서 들고 나오는 이념, 색깔 공세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공세를 펼 수 있는 밑바탕에는 바로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 보이고 있는 민족주의가 있다. 즉 그들 모두 민족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지배계급 사이는 물론 NL(구민주노동당의 주류)세력조차도 민족주의(이데올로기, 정서와 감정)를 앞세워 지배 대 피지배, 노동과 자본의 적대를 호도하거나 가리는 데 똑 같이 일조하고 있다. 물론 남북 사이에 민족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민족문제는 결코 민족주의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냥 해결되지 않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급 문제를 부차화함으로써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가능하게 할 뿐이다. 민족문제는

오직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설령 그 전에 민족문제로 인해 노동자계급이 겪어야 할 고통이 더 가중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그 때까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역량을 키우고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 자본가 정당과 통합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지 못한다. 자본주의 체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형성되는 '전쟁 대 평화', '남북화해 대 남북긴장' 구도는 허구일 뿐이다.

4. 11 총선을 앞두고 밝히고 있는 정당들의 공약을 보거나, 핵안보정상회의, 제주해군기지, 북의 태도와 행태를 둘러싸

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대립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지배와 자본의 유지, 연장, 강화를 낳을 뿐인 허구적 구도다. 모든 핵무기 철폐, 핵 비확산, 핵물질 통제는 지배계급들 간의 협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제국주의 및 그들 사이의 줄타기 외교가 아닌 모든 제국주의에 대한 일관된 반대,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평화체제가 아닌 전쟁 반대와 자본주의 철폐를 통한 평화 실현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야권연대에 의존하거나 NL세력이 내세우는 민족주의로는 민족문제를 올바르게,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은 사회주의 노동자계급뿐이다. **혁명**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상경투쟁과 야권연대

전북지역 버스노동자 80여명이 민주당 정세균 선거사무소 앞에서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은 2010년 12월 8일 7개사업장 공동파업으로 한국노총과 버스자본가들의 공생관계를 폭로하기도 했다. 심지어 버스 자본가들은 전주시장에게 “어이 송시장”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버스 자본가들과 시장이 호형호제 관계인데, 그들이 순순히 민주노조를 인정할 리 만무했다.

146일 파업투쟁의 결과 전주시내버스 5개사는 2011년 4.21합의서를 체결했다. 그 후 2011년 11월에는 우여곡절 끝에 임금과 단협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마련하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교섭태도로 파탄났다. 다시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이 2012년 3월 1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일주일 후인 20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전북고속 자본가들이 4.21합의서마저도 거부하는 바람에 횡수로 3년째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어용노조에 짓눌리다 투쟁을 시작한 버스노동자들의 서울 상경투쟁은 호남에서 자본가들과 결탁

인해 통진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야권연대에서도 노동공약만 있지 정작 몇 년째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상경투쟁은 새누리당 보다는 민주당이 낮지 않느냐며 비판적 지지를 강요하는 야권연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인 것이다.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투쟁속에서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은 민주노조 파괴에 혈안이 되어 자본가들과 놀아나던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측은 4년 선거농사 망친다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버스노동자들의 상경투쟁이 민주당과 상관없는 생떼라면서도, 다른 한쪽

에서는 내려가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에 버스자본가들, 정치인들, 전주시, 공권력이 한 몸이 되어 관광버스와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어찌 그냥 내려갈 수 있겠는가? 재파업에 나선 전주 시내버스 노동자들과 3년째 투쟁을 하고 있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노조 인정이 총선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대선까지, 아니 10년이라도 더 싸우겠다고 한다. 야권연대가 깨질까봐 두려워 투쟁을 접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활적인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자! **역명**



착한 지배계급 박원순



서울도시철도 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뤄졌다. 그러나 당초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과 다른 결과이다. 작년 조중동의 쓰레기 언론들은 박원순시장이 “불법파업 해고자를 포함한 전원”을 복직시켜준다고 떠들었지만, 결론은 복직이 아닌 재취업이었으며 그것도 선별적이고 부분적이었다. 해고자들은 분노했지만 무기력하게, 별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었다! 그리고 남겨진 동지들을 위한 투쟁이 남아 있다.

선거에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

도시철도 해고자들은 오랫동안 실의에 빠져있었다. 노동조합도, 현장도, 세상도, 해고자들에게 전혀 돌파구를 보여주

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은 달랐다. 아니 달라야만 했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 4개나 되는 복수노조로 해고자들이 청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해고자들은 뜸했던 현장도 다시 찾고, 현안문제도 먼저 제기하고 투쟁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고자 복직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뛰었다.

그러나 한 순간이었다. 이런 해고자들의 투쟁이 서울시장 선거에 먹히기까지... 뜻하지 않고 예상치 못하게 오세훈이 빨깃을 시작했고 사장직을 던졌다. 도시철도 노동조합과 해고자들 상당수는 거기에 올린 하였다. 박원순 시민 단일후보와 “노정 협의체”와 “해고자 복직”도 합의하였다. 많은 해고자들이 선거운동

원으로 뛰었고, 노동조합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것을 과거 야권연대나 민주노동당을 통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라고도 불렀지만, 사실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박원순에게 표를 주는 것 말고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선거운동에 올인하는 동안 해고자들이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도, 현장의 인원문제등 현안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모두가 묻혀버렸다.

박원순이 당선되어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

서울시장이 바뀌자 노동조합은 즉각적인 통로를 마련했다. 해고자 문제도 이야기하고 각종 현안문제도 이야기했다. 박원순은 당선된 후 곧 “해고자 전원 복직”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율이 어렵다고 했으며, 정치적인 계산을 시작했다. 특히 해고자 복직에 대하여는 더욱 심했다. 전 원복직이 언론을 타지 않도록, 밖으로 밝혀지면 복직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해부투는 저항하지 못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었기에 서울시의 눈치를 그대로 보아야 했다. 그러나 현상이 변할 턱이 없었다. 현상이 변하지 않았으니 노동조합의 힘도 변동 없었으며 오히려 관리자들은 도철노조의 힘을 빼기 위해 조합탈퇴를 유도했다. 상황이 그러니 현장 관리자들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끼리 뭉치고 더욱 현장을 옥죄었다. 시장은 바

뀌어도 변화는 없었다.

야권연대를 통해 복직을 꿈꾸는 동지들에게.

도시철도의 해고자복직은 이후 야권연대를 통해 복직을 꿈꾸는 해고자들에게 선례와 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도 작년 인천지하철의 복직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재취업을 수용했고, 선별복직 또한 수용했기 때문이다.

야권연대를 통해 해고자 복직을 꿈꾼다면, 그만큼 현상이 파괴되고, 노동조합은 망가지며 해고자들은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더욱이 공공부분의 경우 정부 정책 및 법과 관련이 높아서 이번 야권연대가 아니면 방법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댓가는 혹독하다. 우리처럼 동지들의 일부가 남겨질 수도 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저들, 야권연대의 후보자들이 되니 그들 맘이다. 그들이 보기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다. 도철의 예처럼 우리들이 기껏 만들어 놓은 투쟁도, 야권연대라면 그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도 현장을 방기한 댓가로 아무런 조직적 힘을 받아낼 수 없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다. 절대로 동지들의 힘을 잃어서는 안된다. 정치권을 활용하는 것과 정치권에 올인하는 것, 그것에 꿈무늬를 쫓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역명**